

제4회 토론회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일 시 : (제4회) 2011년 8월 11일 목요일 15:00~17:00

장 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 관 : 국어학회, 조선일보

주 최 : 국립국어원

## 제4회 토론회 일정

일시	내용	비고
15:00~15:05 '5	개회	손범규(SBS 아나운서)
15:05~15:25 '20	표준어 폐지 주장 발표	강희숙(조선대 국어교육과)
15:25~15:45 '20	표준어 유지 주장 발표	윤석민(전북대 국어국문학과)
15:45~15:55 '10	표준어 폐지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강성근(KBS 아나운서, 숙명여대 겸임교수)
15:55~16:00 '5	답변	
16:00~16:10 '10	표준어 유지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성석제(소설가)
16:10~16:15 '5	답변	
16:15~16:45 '30	패널 자유 토론	
16:45~17:05 '20	객석 질의응답	
17:05~17:10 '5	폐회	

##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전체 주제 (시간과 장소는 동일)

- 제1회(6/23) '후진타오'인가 '호금도'인가(중국 인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에 따라야 하는가)
- 제2회(7/7)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
- 제3회(7/21)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 제4회(8/11)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 제5회(8/25)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 제6회(9/8)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 사회자

#### 손범규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국어학박사

### ■ 발표자

#### 강희숙

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교수

1986년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음운 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2004. 2. ~ 2005.1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언어학과 연구교수  
2009. 1. ~ 2010. 12. 한국사회언어학회 총무이사  
2009.12. ~ 2011.2. 한글학회 광주·전남지회장  
1999. 3. ~ 현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교수

#### <주요 논저>

『국어정서법의 이해』(2010 개정판, 역락), 『시로 읽는 국어 정서법』(2007, 글누림), 『국어정서법의 이해』(2003, 역락), 『삶과 글』(2002, 조선대학교 출판부, 공저), 『현대음운론 입문』(1997, 한신문화사, 공역), 『언어 변이와 변화』(1998, 태학사, 공역)  
사회방언학적 차원에서의 국어 음운 변이 및 변화, 호칭어 사용 양상,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사용 양상 및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 다수

#### 윤석민

현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1989), 박사(1996) 졸업. 박사학위 논문: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1996)

전북대학교 출판부장, 인문대학 부학장 역임  
현재 국어국문학과장

#### <주요 논저>

『텍스트언어학의 이해』(공저), 『월인천강지곡의 텍스트분석』(공저), 쉽게 읽는 용비어천가 1, 2, 『쉽게 읽는 중각두시언해』, 『쉽게 읽는 경민편언해』, 『쉽게 읽는 선가귀감언해』 등.  
“텍스트언어학과 화용론”(한국어어미학 34), “중세국어텍스트의 분석방법과 실제”(텍스트언어학 29), “소설과 방언 그리고 텍스트언어학”(국어국문학 142), “웃음의 의미론적 분석”(국어문학, 40), “일제시대 어문규범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용과 변천의 양상”(한국언어문학 55) 등.

### ■ 토론자

#### 강성곤

현 KBS 아나운서실 라디오 팀장 겸 숙명여대 겸임교수

고려대, 고려대 언론대학원 졸업  
독일 베를린 자유대 정치언론사회연구소 연구원

1985 KBS 공채 아나운서 입사  
아나운서실 내 한국어 연구회 활동  
한국어연구부 차장과 KBS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담당 주무 차장 거침. 동 시험 출제·검수위원 역임  
정부언론외래어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사(발음법, 표준어) 역임

#### 성석제

소설가

196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소설집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를 간행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재미나는 인생』, 『반짝하는 황홀한 순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적이다』 등이, 장편소설로 『아름다운 날들』, 『도망자 이치도』, 『인간의 힘』 등이 있다. 산문집으로 『즐겁게 춤을 추다가』, 『소풍』, 『유쾌한 발견』, 『농담하는 카메라』 등을 냈다.

## 목 차

### ■ 일 정

### ■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발표 1: 강 희 숙\_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 1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 발표 2: 윤 석 민\_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11  
표준어 폐지 주장에 대한 단상(斷想)

■ 지정토론 1: 강 성 곤\_KBS 아나운서, 숙명여대 겸임교수 ..... 21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에 대한 토론문

■ 지정토론 2: 성 석 제\_소설가 ..... 31  
「표준어 폐지 주장에 대한 단상(斷想)」에 대한 짧은 의  
문

■ 부 록 1: 표준어 관련 참고 자료 ..... 35

■ 부 록 2: 조선일보 기사 ..... 57  
7월 22일자 기사(제3회 토론회 기사) ..... 59  
8월 8일자 기사(네 번째 주제 토론 기사) ..... 60

발 표 1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강 희 숙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교수

## | 발표 1 |

##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강 희 숙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교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표준어 정책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면서 마련한 ‘표준어 사정 원칙’<sup>1)</sup>을 토대로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완성된 이후, 1988년에 이루어진 <표준어 규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언어 정책 추진의 배경은 많은 근대 민족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언어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표준어는 그동안 국가 공동체의 전 구성원, 곧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는 물론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의 수단 또는 대중적 정보 전달과 공통적 문화 형성의 도구로서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러 표준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법률과 같은 성격의 엄밀성과 엄격성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지나치게 권력화된 나머지 비표준어에 해당하는 방언 사용자나 다양한 집단의 제한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현행 <표준어 규정>의 총칙 제1항에 제시된 표준어의 정의 혹은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표준어의 정의는 우리의 표준어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중선(200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의에는 ‘교양인’, ‘두루 쓰는 말’, ‘현대’, ‘서울말’이라는 4개의 축제가 채워져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표준어는 교육을 받은 지식인의 말이어야 하고, 두루 쓰는 말이어야 하며, 시대상으로는 현대국어여야 하고, 지역적으로는 서울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근간으로 전개되어 온 우리의 언어 정책은 표준어로 하여금 표준 이상의 절대성을 지니고 네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올바르게 못하거나 잘못된 말 또는 적절치 않은 말로 내몰아 왔다.<sup>2)</sup> 이와 같은 언어적 태도 또는 가치 판단이 가져온 결과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 방언 또는 사투리에 대한 우리의 언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바로 표준어 중심의 절대적 언어 정책이 국어의 지역 방언(regional dialects)을 어떠한 언어적 지위로 내몰았는가에 대해 점검해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지구 상의 많은 언어들이 사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sup>3)</sup> 우리의 국어 방언들 역시 그와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지난해 말에 이루어진 유네스코의 보고이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12월, 인도의 코로 어(Koro)와 함께 제주도의 고유 언어인 제주어를 사라져가고 있는 언어 가운데 제4단계에 속하는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한 것이다.<sup>4)</sup>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가 제주어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주도하에 2005년부터 매년 이루어져 오고 있는 지역어 조사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어를 온전히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제주어를 비롯한 국어의 많은 방언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진웅(2004)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서울대 지방’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이한 이분법 속에서 ‘지방’은 빛나는 서울을 비추어 주는 일종의 ‘타자’로 빚어지게 되었다. 이른바 중심 지향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파생된 이분법은 ‘표준어’와 ‘방언’ 또는 ‘사투리’에 그대로 복제되어 그동안 국어 방언이 받아들여 온 차별적 시선은 결코 적지 않았다. 현행 <표준어 규정> 안에서만 하더라도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이른바 ‘복수 표준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된 방언 어휘는 고작 10개에 지나지 않으며,<sup>5)</sup> 해방 이후 이루어져 온 비교적 충실한 국어교육의 틀 안에서 방언이 설 자리는 별로 없었다.

현행 <표준어 규정>이 보여주는 엄밀성 혹은 엄격성 또한 ‘방언’이 설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행 <표준어 규정> 제9항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어의 모음 동화 규칙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보편적 성격을 지니는

1)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2) 표준어에 대한 이와 같은 가치 부여는 표준 변종으로서의 표준어는 ‘좋은’, ‘올바른’, ‘순수한’, ‘적절한’ 것으로, 비표준 변종으로서의 방언은 ‘나쁜’, ‘그런’, ‘오염된’,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조태린, 2007 참조).

3) M. Krauss(1992:7)에서는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인류 언어의 90%가 사멸 혹은 파멸할 것이 그럴싸한 산출”이라고 결론짓고 있다(다니엘 누벨 2007에서 재인용).

4)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6,700여 개의 언어가 있으며, 현재 ‘사멸되었거나 소멸 위기’로 등록된 언어는 2,473개에 이른다. 유네스코는 사라지는 언어를 1단계는 취약한 언어, 2단계는 분명히 위기에 처한 언어, 3단계는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4단계는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5단계는 소멸한 언어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5) 현행 <표준어 규정> 제24항에서는 방언이던 ‘명개, 물방개, 예순’을 표준어 ‘우렁쟁이, 선두리, 어린순’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24항에서는 ‘귀밑머리, 까뭇개대, 막상, 빈대떡, 생인순, 역겹다, 코주부’ 등 7개의 방언 어휘를 기존의 표준어를 대신하는 새로운 표준어로 정하였다.

음라우트, 곧 ‘ㅣ’ 역행동화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표준어 규정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한때 ‘에미, 애비’를 각각 ‘어미, 아비’의 ‘잘못’으로 처리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잘못’이라는 표현은 취소하였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언어학적 해명도 없이 표준형인 ‘어미, 아비’를 참고하라는 방식을 택하여 표제어로 실고 있는 실정이다.

국어 음라우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하면, 음라우트의 실현 정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와 성별,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도 그 실현의 정도가 다른 일종의 언어 변이 현상에 속한다. 이와 같은 음라우트가 공식적으로 생산적인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음라우트가 적용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 평가가 수반되어 왔다. 말하자면, ‘어미, 아비’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한다면, ‘에미, 애비’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 평가의 결과는 결국 ‘에미, 애비’를 잘못된 말이거나 단순히 표준형의 참조 대상일 뿐이라는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에미, 애비’를 비롯한 상당수의 음라우트 실현형들이 비표준 변이형으로서의 의미 이외에 표준 변이형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의미를 획득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에미, 애비도 없냐?”는 사대질에 ‘어미, 아비’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으며, 이러한 예 이외에도 ‘소주’나 ‘원수’ 대신 쓰이는 ‘쇠주~썰주’, ‘웬수’ 또한 의미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쇠주~썰주’ 속에는 우리의 위장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개운함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소주’ 속에는 도수가 조금 부족한 듯한 밍밍함이 드러나며, ‘웬수’ 역시 ‘원수’로써는 답을 수 없는 강렬한 정서적 색채가 수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준어 규정은 이러한 예들을 답을 수 없는 내적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우리의 오랜 관찰을 통해 확인된 언어적 사실 한 가지는 어떤 개별언어도 다른 언어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들이 언어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어가 비표준 변종, 곧 표준어가 아닌 다른 방언에 비해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과 언어 정책은 오로지 표준어만을 강조함으로써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익혀 온 토속 방언 혹은 텃말<sup>6)</sup>을 외면하도록 만들고,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한 죄의식까지 갖도록 함으로써 급기야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도록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민속학자의 눈을 통해 본 방언은 표준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민속과 역사의 다채롭고

6) ‘텃말’이라는 용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운 말”이라는 뜻으로, 2005년에 결성된 지역어 지키기 모임인 ‘텃말 두레’ 회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그동안 이러한 의미의 ‘텃말’을 사투리라고 규정해 주류 언어에서 배제하는 관행에 반기를 들면서 텃말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결성된 ‘텃말 두레’ 회원들은 텃말 모음집인 <전라도 우리 텃말> 등을 간행하는 한편, 우리의 표준어 정책이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내기도 하였다.

풍부한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주강현 2006), 작가의 눈으로 볼 때 방언은 풍요로운 세계를 배후에 거느리고 있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전성태 2004).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방언은 이른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늦은 밤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어지는 실로 다채로운 만큼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전개되는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통의 도구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일상적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가 결코 표준어 일색이 될 수는 없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 누구도 잘 정제된 표준어의 배경하에서만 잉태되지 않으며, 또 세상에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웃들과 또래와의 술한 만남 혹은 접촉 과정에서 정확한 표준어만을 습득하여 구사하는 언어적 삶이 보장되지도 않았다.

우리의 삶이 결코 표준어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많은 먹거리(사실, 이 단어조차도 표준어가 아니다.) 관련 어휘들이다. 가령 전라도 지역에서는 ‘감괘대, 뒤퍼리, 머긋대, 마늘쫑, 목은지, 싱건지, 봄똥, 빨낙지, 서리태, 아구찜, 쭈쭈미’ 등의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것도 표준어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쭈쭈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단어의 표준형이 ‘주쭈미’라고 하게 된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럴 리가요?’라는 표정을 지을지도 모른다. ‘빨낙지’의 ‘빨’이 비표준어이고, 표준어는 ‘펼’이어서 ‘펼낙지’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한다면, ‘뒤퍼리’나 ‘봄똥’과 같은 단어는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찾을 길 없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 허탈감은 극에 달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어휘들이 모두 교양 있는 현대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도 아닌 말’이거나 ‘잘못된 말’에 속해야 한다면, 우리의 혀끝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저 어휘들과 영영 이별을 고해야 할 상황이니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일상적 대화에 반영된 방언 역시 표준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대부분이다.<sup>7)</sup>

“그나저나 아짐, 얼릉 가시잔 말이요. 개장국 다 식긋소.”

“가만있소. 개장국을 끓인다는디 염체가 있제 으치꼬 빈손으로 간당가? 발에 가서 솔 잔 뽕고 페도 잔 뽕고, 짓가심 조간 해서 갈라네.”

이러한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방언에는 표준어와는 상당히 다른 어휘와 음운, 문법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는 표준어와 전혀 다른 이질적 요소가 있는가 하면, 표준어와 동일한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되, 국어 방언들이 겪은 상이한 역사적 발달의 경로로 인해 차이를 보이는 요소도 있다. 예컨대, 표준어의 ‘김칫거리’에 대응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짓가심’은 ‘지+ㅅ(사이시옷)+가심’의 구조, 즉 김치의 옛말인 ‘디히’가 변화하여 이루어진 ‘지<sup>8)</sup>

7) 한세암, 최병두, 조희범, 박원석, 문뜰(2006:91~92) 참조.

8) 그 변화의 과정은 ‘디히>지히(구개음화)>지이(ㅎ탈락)>지(모음 축약)’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에 '재료'를 뜻하는 옛말 'ᄃ슴'이 변화하여 형성된 '가심'<sup>9)</sup>이 합하여 만들어진 합성명사이다. 표준어 '김치가 한자어 '沈菜'에서 변화한 말인 데 반하여, '디히'는 그보다 더 이전 단계에 형성된 순우리말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짓가심'의 가치는 결코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어가 표준어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역사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방언에 대한 외면이 가져온 웃지 못할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과 관련이 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 등장하는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의 정체는 해당 지역 방언을 알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즉, 김유정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을 비롯한 일부 중부 방언에서는 이른 봄에 노랗게 피어나는 ‘생강나무’를 일컬어 ‘동백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어 ‘동백꽃’에 이끌린 독자나 출판업자들은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을,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sup>10)</sup>를 목격하면서도 끝내 ‘빨간 동백꽃’을 그려내고 말았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국립국어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문학 속의 방언 총서’ 가운데 네 번째 권인 『문학 속의 제주 방언』에서는 ‘가름팔~거리왓, 가불다, 갈잠방이, 갑태늘, 강쟁이, 건지뿔, 고마술집, 피우다(페우다), 꿩코, 냇골창’ 등등 대응 표준어가 없는 어휘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만일 이러한 단어들에 표준어에는 물론 여타의 국어 방언에서도 쓰이지 않는 제주어만의 독특한 어휘들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국어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다면, 유네스코의 발견과 지적대로,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의 단계를 지나 맨 마지막 단계, 곧 ‘소멸한 언어’의 단계로 이행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택해야 할 국어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우리의 국어 정책이 이제 더 이상 표준어 수호에만 연연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말하자면 방언은 우리말의 다양성 또는 다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것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흔히들 지적해 온 대로 언어 현실과 심하게 괴리되어 있거나, 그 자체로 내적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몇몇 표준어 규정의 손질이나 복수 표준어의 확대 등의 방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자리나 방송 매체 등에서는 ‘표준어’를, 그렇지 않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전제로 표준어와 방언을 이른바 ‘가려 씹’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단 내지는 평가조차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지극히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일

9) '가심'의 변화 과정은 'ᄃ슴>ᄃ슴>ᄃ슴>가슴>가심'으로 추정된다. 전남 방언에서 '가심'은 '옛가심'(예를 태우게 하는 사람이나 물건), '부엌가심'(부아가 나게 하는 사람이나 물건), '저구릿가심'(저고릿감) 등등의 합성어에서도 쓰이고 있다.

10) '알싸하다'는 “매운맛이나 독한 냄새 따위로 콧속이나 혀끝이 알알하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우리는 알싸한 생강의 향기를 지닌 '생강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김유정의 <동백꽃>의 정체 또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적인 자리에 쓰는 데 좋은 말은 표준어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이 좋다는 말 속에도 이미 어떠한 가치 판단에 근거한 평가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sup>11)</sup>

Milroy & Milroy(1985:48)에 따르면, 문맹 사회에서 '더 나은' 또는 '더 나쁜'으로 판단되는 것은 언어의 서로 다른 '변종'들이 아니며, 그러한 판단은 어떤 발화자가 효과적이고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못하는가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sup>12)</sup> 따라서 만일 어떤 화자가 표준어를 구사하는 것은 서툴지만, 표준어가 아닌 방언으로써는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훌륭하게 수행해 내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규범이나 인식도 그러한 언어 사용을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 절하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른바 다문화 시대에 즈음하여 다른 언어와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한국사회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회 통합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sup>13)</sup> 필자는 이러한 의미의 사회 통합 이전에 선결 과제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방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방언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 것이 아닌 다른 언어와 문화와의 공존을 외칠 수 있게 된 마당에 구시대의 산물인 표준어와 방언, 혹은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인식과 구조를 여전히 고수하려는 것은 다양성의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는 전근대적 사고요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어 정책의 방향은 표준어 중심의 획일적 언어 정책이 아니라 일상성을 포기하지 않는 지역 문화의 복원을 위한 일종의 다언어 정책<sup>14)</sup>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이른바 글로벌 시대 또는 다문화 시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다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순(2007)에 따르면, 오늘날 국가적 차원에서 다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 국가에 달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둘 이상의 언어에 대해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 산술적 계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 능력은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표준어라는 단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만을 가지고 있는 화자와, 표준어 외에 또 다른 지역 방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지

11) 이와 같은 관점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조사 결과가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국립국어원 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표준어와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에 대한 설문에 대해 31.5%가 '표준어는 방언 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27.5%에 지나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5년 전인 2005년의 조사에서는 각각 20.8%, 47.8%로,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당한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2) 조태민(2007:221)에서 재인용.

13) 법무부 훈령 제813호(2011.1.17. 개정),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참조.

14) 엄밀한 의미에서 다언어(multi-lingual) 정책이란 둘 이상의 개별 언어(particular language)를 국가적 차원의 공용어로 정하여 허용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여기에서는 그 의미를 확대하여 개별 언어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종들을 공용어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언어 정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닌 화자의 언어 능력은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모두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지닌 국민이 바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지역 방언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러한 방향의 언어 정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sup>15)</sup>

요컨대, 이제 사투리라는 이름의 우리의 지역 방언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되살려서 길이 보존해야 할 대상임은 물론, 표준어와 동등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언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언어 정책의 토대 위에서 현재의 표준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의 ‘공통 한국어’의 개념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표준어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때의 ‘공통 한국어’는 오늘날의 표준어에 한 발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한국어가 아니라, 국어의 모든 방언과 계층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총체적 의미의 한국어 가운데 그 쓰임에 있어 가장 많은 공통성과 보편성을 지닌 한국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sup>16)</sup>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10), 『201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김봉국(2009), “지역방언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35, 국어교육학회, pp.65~86.
- 김선철(2006), 『중양어의 음운론적 변이 양상』, 경진문화사.
- 다니엘 누첼(2007), “문화의 변화와 소수언어의 변화”, 『새국어생활』17-4, 국립국어원.
- 박갑수(2004), “표준어 정책의 회고와 반성”, 『새국어생활』14-1, 국립국어원.
- 박영순(2007), 『다문화사회의 언어문화 교육론』, 한국문화사.
- 손중선(2007), “새로운 표준어 정책 방향”, 『언어 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자료집』, pp. 53~63.
- 안상순(2004),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생활』14-1, 국립국어원.
- 이태영(2007), “공통어 중심의 언어 정책”, 『언어 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자료집』, pp. 38~49.
- 전성태(2004), “방언의 상상력”, 『내일을 여는 작가』, 봄호, pp. 60~67.
- 정진웅(2004), “서울과 지방: 그 중심 지방의 문화를 넘어서”, 『당대비평』 26, pp. 52~60.
- 조태린(2004), “계급언어, 지역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 pp.74~87.
- 조태린(2007), “표준어 정책의 문체점과 대안 모색”, 『한말연구』 20, pp.215~241.
- 주강현(2006), “민속의 종 다양성과 언어정책”, 『2006년 언어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국립국어원, pp. 47~55.
- 한새암, 최병두, 조희범, 박원석, 문틈(2006), 『전라도 우리 옛말』, 소금나무.
- Milroy, J.& Milroy L.(1985), Authority in language: Investing language prescription and standardization, London and Newyork: Routedge & Kegan Paul.

15) 다행스럽게도 2007년에 고시된 <제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표준어와 방언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를 토대로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의 구성이 이루어진 바 있다.

16) 이러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려면 김선철(2006:126~129)에서 제시된 바 있는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근거하는 대규모 기술사전의 편찬과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 표 2

## 표준어 폐지 주장에 대한 단상(斷想)

윤 석 민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발표 2 |

## 표준어 폐지 주장에 대한 단상(斷想)

윤 석 민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1. 들어가며 -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

표준어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다. 표준어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공포한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였으니 벌써 80여 년 전의 일이다.<sup>1)</sup> 그 후 표준어는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맞게 여러 차례 개정되고 보완되어 왔으나 표준어의 존립 자체를 두고 요즘처럼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경우는 없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다듬어 온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표준어를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요즘의 상황이 아쉬울 뿐이다.

표준어 폐지의 논란에서 중심에 있는 것은 방언 문제이다. 표준어와 방언의 구별이 불합리한 우열성의 구분이 되고 표준어 사용 권고가 자연스런 언어의 발달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표준어의 개념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나아가 상호보완적인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표준어가 무엇이며 또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살핌으로써, 표준어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끼고 다듬어 발전시켜야 할 아름다운 우리말'임을 밝히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2. 표준어는 한국의 공통어이고 방언은 지역의 공통어이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표준어는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통어'라는 점이다. 언어의 가장 큰 목적은 의사소통이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의

생각을 이어주고 행동을 이끌어내며 협력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언어의 가장 큰 기능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공통의 언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표준어이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이 표준어를 이용하여, 공동체의 구성원과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물론 방언에도 이런 공통어로서의 기능이 존재한다. 방언 역시 특정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적 공동체 안에서는 그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특히 동일한 공통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대개 그러하듯이 특정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방언의 사용 그 자체가 강한 연대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의식은 자칫 그 지역 공동체를 벗어나면 역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서로 다른 공동체라는 이질감은, 공동체 안의 동질감이나 연대의식이 주는 장점 못지않게 커다란 단점이 되어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표준어에는 이러한 이질감이 없다. 오히려 표준어를 통하여 한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고 있다는 동질감과 연대의식이 은연중에 강화된다. 같은 말을 하면서 생활하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믿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체 발전의 필수 요소라고 할 것이다. 표준어와 방언은 모두 공통어로서의 기능을 한다. 다만, 방언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통어라면 표준어는 각각의 지역 공동체를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적 공동체에 적용되는 공통어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 표준어와 방언은 상호보완적이다.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 표준어가 가진 '잘못된 우열성'의 위험성을 문제로 삼는다. 표준어란 말 그대로 표준이므로 표준어가 아닌 말은<sup>2)</sup> 비표준어로서 잘못된 말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비표준어에 속하는 방언의 경우 그것이 잘못된 말도 아니고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 표준어 규정을 든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총칙 제1항)"는 규정에 나오는 '서울말'에 방점을 두어, 그것이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우열성을 가져오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서울말이 아니더라도 방언은 우리말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주장도 있다. 방언 역시 우리말이며 따라서 아끼고

1) 표준어 규정이 1933년 정해졌으나 실제 그것이 적용되어 표준어를 정한 것은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였다.

2) 여기에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나 틀린 말 등 다양한 말이 포함된다.

보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에는 그 누구도 반대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표준어를 방언과 대립적 관계로 보고, 표준어가 아니면 즉 비표준어이면 모두 잘못된 말이라거나 방언은 모두 비표준어라거나 표준어와 방언은 서로 별개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런 생각은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

표준어와 방언은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표준어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말이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표준어는 한국어라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공통어이다. 따라서 표준어에는 지역적 계층적 구분을 떠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반영되어 있다. 거기에는 그래서 다양한 방언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여러 지역적, 계층적 방언 가운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널리 이해될 수 있는 말이 표준어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표준어와 방언은 대립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 보완적인 관계이다. 예를 들어 ‘멍게’나 ‘빈대떡’ 등은 원래 방언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사용하는 표준어가 되었다. 규정에 나오는 ‘서울말’이나 ‘교양 있는 사람들’을 글자 그대로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다. ‘서울말’은 단순히 ‘서울특별시의 말’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사회의 공적 언어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말을 기본으로 하여 공통어가 성립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우리의 경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서울지역의 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교양 있는 사람’의 경우 역시 누가 교양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예스런 표현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말을 사용하자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sup>3)</sup>

앞에서 말했듯이 표준어는 방언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언이라면 언젠든 표준어가 될 수 있다. 표준어는 특정 지역의 말이나 특정 계층의 말 나아가 특정 시기의 말에만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준어의 이러한 개방성은 지난날 표준어의 개정 과정에서 주된 작업 대상이 되었던 것이 ‘시대가 변화하여 사람들의 언어생활이 변하였거나 방언이나 신조어 등 세력을 얻어 널리 쓰이게 된 것’이었던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 4. 표준어는 외국인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대 무역국이며 하

3) 표준어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말의 자연스런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주장은 방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이나 결정이 문제가 된다는 논리대로라면 어떤 말을 특정 방언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보존하려 노력하는 것 역시 방언의 자연스런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계 및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월드컵과 G20 등 세계적인 행사가 수시로 열리는 국제적인 나라이다. 한해 1,000만 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또 그보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광이나 사업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한다.<sup>4)</sup>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최근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한류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이어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우리의 경험은 많은 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증대된 한국 및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설치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다.<sup>5)</sup> 매년 한국어능력인증시험(KLPT, TOPIK)을 보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sup>6)</sup>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여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라도 늘고 있다.<sup>7)</sup> 교육적 목적이나 사업적 목적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지만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고 있다.

이런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 전반을 두루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인과의 소통에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 가장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표준어이다. 개인적인 언어 차이, 지역적인 언어 차이, 계층적인 언어 차이 등을 넘어서서 어느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표준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방언도 한국어의 하나로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외국인들도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의 모습을 알고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 목적에서든 공적 목적에서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일차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한국어는 표준어인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이 효과적이다. 수많은 방언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두루 통하는 표준어의 학습을 통해 한국의 어느 분야, 어느 지역, 어느 계층의 사람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표준어는 한국어를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효과적이며 기본적인 한국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4)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객 입국 수를 보면 2010년 한 해 약 880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까지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외래객 입국(2010).

5)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는 공식적인 것만으로도 2,000개가 넘고 그 기관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25만 명이 넘는다. 국립국어원(2010),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참조.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것으로 비공식적인 기관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 TOPIK 응시자는 1997년 2,274명에서 2009년 189,320명으로 늘었다. 국립국어원(2010), 우리말의 이모저모, 참조.

7) 일본에서는 약 300여 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SAT에서 제2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 또한 200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 64개국 742개나 된다. 국립국어원(2010), 우리말의 이모저모, 참조.

8) 표준어는 다른 방언들처럼 개인적이고 사적 언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용어(公用語; official language)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적 목적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에게 표준어는 효율적인 한국어이기도 하다.

## 5. 표준어와 방언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표준어와 방언은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소중한 우리말이다. 표준어 역시 방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방언이 아니라 지역이나 계층을 넘어 구성된 모두에게 널리 사용되는 방언인 셈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우리도 실제 말을 할 때 이런 각각의 역할을 이용한다.

지역적 특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공적 대화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역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에서 특정 지역의 방언은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동일한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할 때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의도적인 표준어의 사용이 오히려 부정적이기도 하다.<sup>9)</sup>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표준어가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 방언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러나 표준어의 존재가 그런 인식을 가져오는 기본 원인이라는 생각은 더더욱 잘못이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표준어와 방언은 각자 역할이 있어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거나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는 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들의 역할을 살려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학작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는 많은 전라도 방언, 특히 전주나 남원 방언이 등장한다. 직접 인용된 대화 부분은 거의 방언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라도 사람이 아닌 독자라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화 부분과 달리 지문은 대부분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문을 표준어로 기술하는 것은 다른 소설에서도 일반적이다. 방언을 사용하여 소설 속 인물의 현장성을 드러내주면서도 지문을 통해 이야기의 일반적인 전개에 대하여 독자와 소통하려는 의식이 잠재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준어는 표준어대로 방언은 방언대로 각자의 역할을 살려 더 윤택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표준어는 언어생활의 혼란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표준어는 언어의 변화에 발맞추어 바뀔 수 있다. 표준어가 자연스러운 언어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어가 가지는 문제점으로 인위성, 즉 의도적으로 언어의 변화를 조절하려 한다는 점을 드는 경우가 많다. 표준어를 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말은 되고 어떤 말은 안 된다고 정하는 것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언어 변화의 방향성을 거슬러 의도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어는 그 자체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끝내 그런 역행적 변화는 지속될 수 없다. 언어의 변화는 그 자체의 체계적 변화 방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준어가 여러 차례 개정될 때마다 우리말의 변화를 반영하였고 그 방향성을 고려해 온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표준어가 고착되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변화 방향과 다르게 정해졌다면 우리 구성원들로부터 거부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 구성원들의 언어생활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표준어가 우리 구성원이 느끼기에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 표준어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 개인적인 언어 사용이나 목적에 따라 표준어와 다른 말의 사용을 원할 수도 있다.<sup>10)</sup> 그러나 표준어는 언어생활의 혼란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면서 겪을 사회적 혼란과 의사소통의 불편을, 지금까지 표준어가 공통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적 환경에서는 쉽게 느끼기 힘들 뿐이다. 표준어를 처음 만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러한 어려움은 쉽게 알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표준어를 포함한 우리말의 규범이 본격적으로 제시된 것은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이다. 식민지 시절 이를 막으려는 일제의 눈을 피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3년 간 125 차례의 논의를 거쳐 비로소 완성된 이 규범은 이후 표준어 사정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나아가 오늘날 표준어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sup>11)</sup> 우리 선조들은 개화기 시절부터 언어생활의 혼란을 피하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 언어규범을 정리하려 했었지만 일제 치하가 되자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더해져 언어 규범의 완성을 위해 더더욱 힘을 들였었다. 같은 말을 사용해야 뜻이 통하고 그에 따라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 밑바탕에 있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말의 사용을 강제로 억제

9) 최근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방언화자의 의도적인 표준어 사용이 웃음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개그콘서트 <서울메이트>.

10) 표준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필요가 있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가 표준어를 없애자는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11) 한글학회50돌기념사업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참조.

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생활이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되면서 무분별한 외국어의 사용이나 뜻을 알 수 없는 외계어나 개인어의 오남용으로 우리말의 파괴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주변의 언어상황을 잠시만 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나, 어느 집단이나 마음먹은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sup>12)</sup> 이러한 혼란을 막고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우며 우리가 같은 구성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표준어이다. 그것도 우리말의 변화에 맞춰 그 필요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 7. 마무리하며 - 표준어와 방언, 더 적극적인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표준어와 방언은 나름대로의 가치와 역할이 있다. 방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커져야 한다. 그와 함께 우리 모두가 속한 공동체의 말로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표준어를 더욱 더 이롭게 다듬고 풍부하게 가꾸는 일 역시 우리의 당연한 의무요 보람이다.

표준어가 언어의 자연스런 발달을 가로막고 방언을 폄하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관심이거나 노력이 부족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진 많은 언어들<sup>13)</sup>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논란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히려 표준어와 방언에 관심을 주어 그 역할을 살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계 문화에도 기여하는 다른 언어들 사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표준어를 만들며 느꼈을 선조들의 고민이 지금 다시금 떠오른다.

12) 2005년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여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공포된 국어기본법의 취지도 이런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이다.

13) 또한 유엔 보고(2009)에 따르면 전 세계 6,500여 개의 언어 가운데 5,900여 개가 21세기에 소멸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지정토론 1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에 대한  
토론문

강 성 곤

KBS 아나운서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강희숙 교수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

#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에 대한 토론문

강 성 곤  
(KBS 아나운서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1. 표준어의 개념과 역할

### 표준어 담론의 시대적 배경

- 2000년대 이후 시대의 핵심 키워드 → ‘다원화’,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화시대’
- ‘나눔’, ‘배려’, ‘사회적 책임’ 등이 시대적 의제
- ‘중앙 집중’, ‘서울 만능’을 시대적 가치라 할 수는 없다!
- 그러나 만능의 가치이며 마구잡이식 잣대는 곤란
- 이는 ‘다수’와 ‘소수’, ‘우리’와 ‘너희’의 대결이 아님, ‘소수에 대한 배제’이나 ‘소수를 위한 전위대’ 식 해법 모두 문제
- 한 나라의 언어정책은 무엇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를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 표준어의 존재는 ‘배제’가 아닌 ‘통합’. ‘가장 느슨한 접점 영역’

- ‘호환’, ‘범용’의 미덕이 적용돼야(→ 세계 속의 한국어)
- ‘역사란 사실(事實)과 記述(기술)로 이루어짐. ‘기술’은 곧 ‘사관(史觀)’ -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의 문제 - 표준어담론에도 적용해야

“교양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함”

문제: 교양 있는? 서울말?(서울의 범위, 정체), ‘원칙’ 부분을 이해해야

- 오토 예스페르센(Otto Jespersen): “표준어란 우리들이 그 발음을 듣고 어느 지방 사람인가 분간할 수 없는 말”

- 김민수: 표준어: 있어야 할 말, 객관성, 특정 지역  
방언: 있는 그대로의 말, 주관성, 모든 지역어

표준어를 통해 통치(정책), 교육, 소통이 이루어짐.  
표준어와 지역어는 상보적 관계  
표준어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공용어

소통의 효율성, 적절성, 정확성  
수도권 중심의 언어가 표준어 기능을 하는 것이 일반적  
지역 방언권과의 관계에서 어휘, 발음, 문법에서 차이

- ① 공용성(公用性) → 공용어
- ② 규범성(規範性) → 규범어
- ③ 공통성(共通性) → 공통어 → 표준어 개념, 정책, 교육

- ① 공용어(Official Language) : 공식적으로 쓰이는 언어, 공식어  
- 다문화사회, 미국의 예(오직 영어?, 영어 플러스?)  
지방화시대 vs 국어의 국제화 요구(국어의 표준화)

- ② 규범어(Priscriptive & Normative Language): 규범적 언어  
- 규범 문법, 규범 표기에 따라 쓰는 것 → 표준을 정해야, 표준어의 힘, 우월적 위치  
현행 표준어 규정(1988) 은 복수 표준 등 융통성, 예) 명계, 시나브로, 보듬다(서남)  
형태, 발음, 의미의 3차원적 표준화를 충족시켜야  
표준 표기, 표준 발음, 표준 의미

- ③ 공통어(Common Language): 공통어로서의 표준어  
- 여러 다른 종족이나 민족 사이에서 두루 쓰는 말, 한 나라에서 두루 쓰는 언어  
아랍어, 러시아어(CIS)

### \* 표준어와 공통어 논쟁

- 포괄적인 공통어 중심의 다원주의 방향으로 가야
- 통일·지방화 시대, 언중의 선택을 넓히는 쪽으로 가야



- 상당수 방언형을 비표준어로 처리, 예) 손자>손주 낚새>내음 날개>나래
- 표준어 對 非표준어, 교양인 對 非교양인, 서울말 對 非서울말?
- 교양인의 말-서울말-표준말, 對 非교양인의 말-지방말-非표준말? → 갈등 연출.
- 표준어를 공통어로 바꾸면 문제 해결?
-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타당, 단일 민족어인 우리에게 무리
- 공통어라 해도 표준형은 필요. 표준 없는 공통은 이상
- 모호한 개념의 공통어 정책은 국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킴

1988 표준어규정 이후 복수표준어 규정 증대 → 융통성의 표현

## 2. 표준어와 지역어

“표준말이 공식적인 자리나 방송매체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적인 말이라면, 텃말은 내가 누구인지 내 역사와 내 부모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말”

“‘텃말’이란 어머니 뱃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들으며 자기정체성을 만든 지역어”(텃말두레)

“표준어규정과 공문서 및 교과서에 표준어를 쓰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9/5/28)

“표준어규정이 지역방언을 차별대우하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텃말두레, 2006/5)

- 일제가 원흉?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어(中央語)를 공용어로 함은 세계적 추세. 순리, 효율적(인구 측면)  
건전한 표준어 정책은 방언 보존 정책을 포함함. 방언 발전 역시 튼실한 표준어 정책 위에서만 가능.
- 표준어와 방언은 공존, 상생 개념  
특정 방언을 임의로 강제적으로 표준어나 공통어로 올리려는 노력 자체가 새로운 강요현상으로 인식되어 반발을 살 수가 있다.  
방언의 발굴과 활용은 물론 중요하다. 각 방언에 숨어 있는 일상어, 민속어 등을 발굴하고 그 표현을 나누고 이해하며 한국어의 숨결을 느끼는 일 역시 의미 있음.

## 3. 표준어의 역사성

19세기 이후 국민국가 시기(자본주의 경제체제) 성립된 공교육 체계 정립과 더불어 정착 ‘표준어’ 용어 자체는 19세기 후반

표준어 형성은 근대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

표준어의 형성은 자본주의적 물질 토대에 기반을 두는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에 필수적 요소 (Bourdieu)

부르주아들이 근대 민주주의 기구와 의사소통의 통로를 선점 → 언어 통일 제일의 수혜자가 됨. 수도 및 그 주변에서 노동력을 위해 이주한 농촌 지역 변종어들을 흡수 동화시킴.

1933년 상황(‘한글마춤법’ 통일안) 현재 중류사회 서울 → 근대 부르주아 도시(수도)

표준어를 ‘올바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발달한 표준어를 가진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전형적 현상.

“표준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다.” (반론 없음)

표준어가 없다면 통일성, 일관성 있는 교육이나 대중적 정보전달 및 공통 문화 형성이 어렵다는 공감.

“국가가 아직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가정 하에 공적 언어의 통일이 국가 공동체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첫걸음이고, 공적 언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표준어가 정립되어야 한다.”

\* 역설(逆說): 방언적 차이가 전 국민적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큼 약화된 상황에서는 표준어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갈등을 일으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집단의 제한적 의사소통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반감이 생겨 표준어 고유 기능마저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현상이 일어남.(↔ 보수적 규범주의자)

- 표준어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될 때, 상대적으로 방언을 대우하라는 요구도 일어남. 2004. 8. 8 KBS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KBS 입사를 위한 의무사항이 됨.

기존 ‘국어능력시험’과 함께 국어의 시장이 확대됨. → “국어가 경쟁력이다.” 언론 관심 한국어 관련 참고서의 스테디셀러화 ‘어문규범집이 참고에서 나옴’

2005. 7 <국어기본법> 시행

반작용: 텃말두레, 2006/5, 헌법 소원(평등권, 행복추구권, 교육권 침해? 2009 패소) 기존 독점적, 일방적, 경직적, 하향적 표준어 정책에 대한 성찰 필요

- 보수적 규범주의자: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국적 의사소통의 단절 내지는 국민 분열 등과 같은 재앙 상황으로 과도한 반응(강박적 도덕) 사실, 표준어는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방식에 의해 높은 수준의 규범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진 언어(언어적 변종)'

#### 4. 표준어에 대한 인식 변화

자본주의의 형성과 근대적 국민국가의 정착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서의 언어 표준(Language Standard)을 의식적이고 특수한 규범으로서의 표준어(Standard Language)로 변화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가 늘 표준어 형성 및 관리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표준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규정 고시하고 목록까지 제시하는 예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 (일본, 프랑스도 아님.)

대부분의 나라들은 표준어가 권위 있는 사전이나 문법서에 의해 학습되며, 언론이나 학교 교육에서 쓰이는 형태를 표준어로 인식하는 방식 (독일 Duden, Warig, Langenscheidt)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일을 맡아 할 곳은 '국립국어원'밖에 없다.

“실태조사만 하고 표준어 사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 정책의 직무 유기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

표준어/비표준어 대립 논리보다 기본어 → 확장어 식의 단계 논리, 또는 공적 언어/사적 언어 논리 도입이 대안.

표준어 : 객관적이고 분명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공적인 공간, 장면

다양한 주관적 생각과 느낌을 담아 표현해야 하는 사적 공간, 장면은 한계

“표준어는 국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도구

방언은 우리 삶의 생생한 모습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 둘 다 가치 있음”(권재일)

“사전에는 각 단어의 사용빈도와 사용상황에 대한 정보 등만을 실는다.

비표준 변종 사용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죄의식을 주지 않는다.”

→ 두 개 이상의 다양한 표준 변종 사이에서 경쟁과 선택이 중요해짐.

#### 5. 표준어의 필요성

많은 이들이 기존 표준어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일상의 언어생활이 아닌, 교육이나 방송 분야에서는 다양한 변종들의 존재나 경쟁을 부담스러워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단일한 표준어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수표준어' 인정은 낱말의 어휘 차원에서가 아니라 '언어 체계'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영국의 표준적 영어: Recieved Pronunciation(RP) → 표준적 발음  
'Recieved' → '인정받은',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Queen's English, BBC English, Oxford English를 순화한 용어, 표현

일본은 '내지(나이치)방언'(内地方言) 과 '유구(류큐)방언'(琉球方言)으로 나뉘었다. 내지 방언은 동일본 방언, 서일본 방언, 규슈방언으로 나뉘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로는 동일본 방언인 도쿄말을 표준적인 일본어로 한 '공통어'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문화어: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주체적으로 발전한 아름다운 언어”

##### 표준어의 필요성 요약

- 의사소통의 편의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표준적 규범으로서의 가치
- 지역주의와 지방색을 없애줌, 민족적 화합에 기여
- 정보화시대, 다국어의 호환을 위해서라도 통일된 한국어 체계가 필요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간결하게 정리한 규범언어 절실.

표준어와 방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국립국어원, 2010)

-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5%
-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5.4%
- “표준어든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31.5%

## 6. 표준어 담론과 관련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 표준 문자보다 표준 억양, 표준 어조, 발음 습관, 강세 위치 등이 담론화 되어야.  
‘다슬기’를 ‘올갱이’, ‘고동’, ‘대수리’, ‘달팽이’라 한다고 위화감이나 부끄러움이 들지는 않는다. → 표준 문자의 문제는 오히려 심각하지 않음.  
표준 억양, 표준 어조를 익히고 배우고 싶은 침묵의 다수 존재  
표준어, 지역어를 모두 구사하는 신세대 증가 → 미래의 긍정적 사회적 변화를 위해 어떤 룰이 적용되어야 더 바람직한 것인가 따져야.
- 표준어와 방언 관계는 마치 교양어, 미디어 언어의 필요성과 유사  
장님, 병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등 - 문학적, 주관적, 친근함, 사적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 격식적, 행정적, 중립적, 공적
- 지역어 사용자의 공적 공간, 방송에서의 출연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태도와 마음가짐의 문제  
최대한 표준 억양과 어조를 구사하는 노력 보여야  
해당 지역어 사용자임을 드러내는 자세가 오히려 배타적 감정과 위화감 조장 가능성
- 사투리, 방언의 용어 사용 비 적절성 문제  
‘서툴다’ 어원에서 유래한 ‘사투리’ 차별적 언어에 해당  
‘방언’은 ‘지방의 말’의 의미, 서울과 대비 → 지역어(단순한 영역의 다름 차원)
- 표준어 사용자와 표준어 구사 노력자의 의식과 시각도 고려해야  
의도를 갖고 과도한 자의식으로 표준어를 사용 안 하는 것도 문제  
타 지역어 사용자의 위화감 촉발
- 표준어규정과 맞춤법규정 점진적 정비 필요
- 복수표준어 확대
- 표준억양, 표준어조, 표준발음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설치
- 공식 후보자, 방송 고정 진행자 등의 표준어 구사 라이선스 제 검토

지정토론 2

「표준어 폐지에 관한 단상」에 대한  
짧은 의문

성 석 제  
소설가

■ 윤석민 교수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

## 「표준어 폐지에 관한 단상」에 대한 짧은 의문

성 석 제  
(소설가)

< 필자의 요청에 의해 토론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 록 1

표준어 관련 참고 자료

## □ 표준어 정비의 역사

- 1933년에 발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칙 제2항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
- 조선어학회에서 표준어를 사정하여 1936년에 9,000여 개의 표준어 모음을 수록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간
- 문교부 고시 제88-2호(1988.1.19.)로 ‘표준어 규정’ 고시
  -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경향도 감안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이 구절의 또 하나의 의도는 이렇게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표준어를 못 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의 강조도 포함된 것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이므로, 공적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표준어 규정 해설’ 중에서)
- 1990년 국어연구소에서 『새한글사전』(한글학회 간행)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간행)에서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심의한 결과인 『표준어 모음』을 발간
- 1999년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 □ 헌법 소원 관련 사항

- ‘2006헌마61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 확인’의 청구인 요지
  - ①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울말로 한정된 현행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 ② 공문서와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의무를 담고 있는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8조, ③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역어 보전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 등의 부작위가 있어, 위 각 사항들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0조 제1항(행복추구권), 제31조(교육권)에 위반된다.
- 2008년10월 변론요지서
  - 2. 청구의 취지 및 목적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표준어규정’은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

민적 합의에 기하지 않고 제정된 것이고 그 규정내용 자체가 서울 외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거주하는 청구인들을 상대적으로 열등화하고 차별하여 평등정신에 반하는 등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표준어규정은 국어기본법에 의하여 공문서 작성과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저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구인들은 자신에게 훨씬 사용이 편하고 자연스러우며 의사나 감정의 표현에도 용이한 자신의 지역어가 아닌 ‘서울말’의 사용을 사실상 강제 당하고, 지역어에 대한 교육 등도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반사적으로 지역어가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어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용이한 언어생활수단을 잃게 되어 상대적인 문화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결국 헌법상의 교육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행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를 공문서와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에 사용하도록 강제한 국어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교육권, 행복추구권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언어문화의 여건과 상황도 크게 변한 오늘에 있어서, 과거의 차별적이고 획일적인 사고에 기초한 표준어규정과 이를 토대로 한 국어기본법의 해당 규정이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에 부합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인 지역어를 보전, 발전시키고 세계화 속에서 문화강국의 국가경쟁력이 되도록 개정되기를 바라며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2009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06헌마 618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표준어 규정(1988.1.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표준어의 지정으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제약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인 제약이라 할 수 있을 뿐 법적 효과로서의 기본권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국가가 특정의 방언을 표준어로 지정함에 따라 다른 방언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표준어의 정의는 서울지역어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라는 의미일 뿐 그 표준어를 쓰는지 여부와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표준어의 정의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교육과 행정언어를 통하여 표준어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명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공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각 지방의 지역어로 집필하거나, 공문서를 각 지역의 지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일한 언어 공동체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규율 내용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가령, 한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공문서는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기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서, 통일적인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공교육의 교과용 도서를 해당 지역의 지역어로 집필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학생들이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표준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지역어를 교육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 공동체의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입법자는 이와 같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통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공익과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

○ 2009년5월28 헌법재판소 결정 중 두 재판관의 반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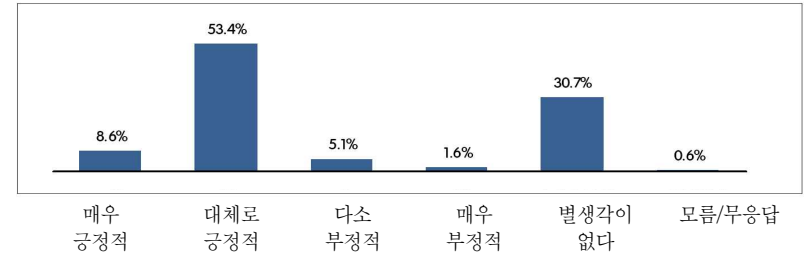
- 일제 강점기에 선각적 지식인들이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간절한 노력으로 표준어의 기준을 수립하였다는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최초 표준어 기준이 만들어질 당시와는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기준을 엄격하게 고수함으로써 표준어의 기준이 보수적이고 타성적인 규범

으로서 작용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표준어와 우리 언어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언어규범을 개정·폐기하여 표준어가 자유롭게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국어가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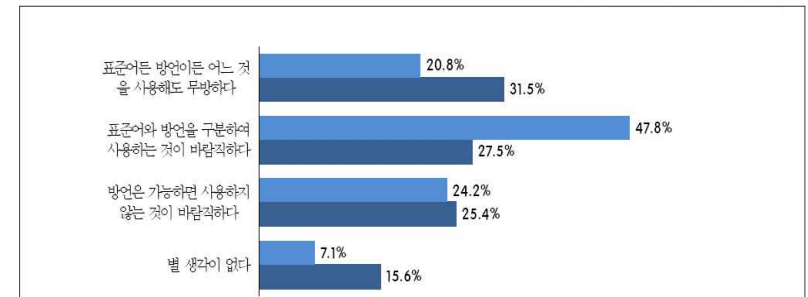
- 종래의 국가가 주도하는 표준어 정책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위적인 언어형성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민간 주도의 표준어 내지 공통어 형성은 언어 사용자에 의한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언어형성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높은 문화수준, 국민들이 갖는 자율적 문화형성에 관한 자연스러운 욕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국가가 주도하는 우리의 표준어 정책이 과연 미래에도 합당한 국어발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향후 국어학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어사용자인 우리 국민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 (국립국어원 보고서,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 표준어와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옅은 색(위)는 2005년 조사 결과, 진한 색(아래)는 2010년 조사 결과임



## □ 논점에 대한 기존 견해들

## ○ 김정대(2004)

- 이론적으로 말해, 방언이 표준어에 비해 '더 하위의 말', '기피 대상의 말'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서울에서 사는 지역 출신 사람들이 표준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중압감은 상상 밖으로 크다.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밀려난다는 강박 관념은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30)

- 지금부터라도 현행 표준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 공통어' 선정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중략- 이런 작업은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나라 전체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내 고장의 말이 표준어로 사용된다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표준어가 갖고 있는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가 우리 나라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다 드러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부족한 부분을 방언이 메워 나가야 하고, 메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적인 현상으로서의 접근 방법이다.(31~32)

- 우리 나라의 표준어는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표준어 사용 자체가 또다른 계급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은 정확히 지적되어야 한다. 이제 와서 표준어 사정 원칙을 무효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폐해 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었다. 각 지역의 방언 가운데 좋은 말들을 표준어로 사정하는 일은 그런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서울말(표준어)에는 없는 다양한 우리말(방언)을 표준어로 사정하는 일은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나라의 표준어도, 서울말 중심이 아닌 '공통어' 중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36)

## ○ 안상순(2004)

- 영어에는 요지부동의 성문법적 표준 규범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전거를 들거나 규정을 들먹여 '이것이 표준 영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표준 영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막연하고 모호한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다. 기껏해야 BBC 방송이나 운서사가 사용하는 말은 표준 영어일 것이라고 상정하는 정도다. 그렇다면 명시적

표준어 규범의 부재가 영어에 혼란을 부를까? 그렇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휘와 다채로운 표현을 자랑하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규범이 까다롭고 엄격한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언어를 규범과 비규범으로 양단하는 이분법에 빠져 있다. 사람들은 표준어는 맞는 말이고 우월한 말이며, 비표준어는 틀린 말이고 열등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념에 매여 있는 한, 풍요롭고 기름진 언어 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말의 다양성을 박탈당한 채 획일화된 표현만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급한 문학과 섬세한 정신이 가능하겠는가? 이제라도 이런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땅에서 쓰이는 모든 말들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 그 말들은 제 나름의 존재 이유를 가진다. 거기에 우열은 없다. 말마다의 구실이 다를 뿐이다. '응큼하다'는 '영큼하다'의 열등하고 잘못된 말이 아니라, 다른 빛깔과 울림을 갖는 독립적인 말이다. '나래'는 버려져야 할 말이 아니라 문학적 감성을 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운치 있는 말이다.

어느 사회든 주류의 말과 비주류의 말이 있을 수 있다. 영국 영어에서 런던 말이 그 러하듯 국어에서 서울말은 주류의 말이다. 그러나 주류의 말이 우월한 말은 아니다. 다만, 한 나라 안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보편적인 말일 뿐이다. 방언은 비주류의 말이지만 열등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비록 사용의 제약성이 있긴 하지만 지역민의 삶이 응축된 소중한 우리말이다. 방언에는 또한 표준어가 가지기 어려운 강한 정서적 환기력이 있다.(76~77)

- 제1안은 현행 규정은 가급적 그대로 두되 복수표준어를 지금보다 훨씬 확대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는 서울 지역의 교양인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은 최대한 표준어로 받아들여자는 것으로, '현 표준어+새 표준어' 방안이다. 이 안은 현행 규정은 거의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규정 폐기에서 오는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필자가 제기한 표준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안을 택하는 한, 여전히 '표준어=맞는 말, 비표준어=틀린 말'이라는 이분법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77~78)

- 제2안은 표준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예 표준어 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이분법을 지양하자는 데 강조점이 있다. 즉, 말을 더 이상 규범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맞는 말과 틀린 말로 가르치지 말자는 것이다. 말은 어떤 이유로든 그 사용을 억압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다.(79~80)

## ○ 김세중(2004)

- 최근 제기되고 있는 표준어에 대한 반성 움직임은 그간의 경직된 표준어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표준어 사정 결과는 표준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낳았다. 그러나 표준어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표준어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다.

표준어가 없다면 우선 공문서, 법률, 교과서, 신문, 방송, 출판 등이 큰 혼란을 빚을 것이다.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반 사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표준어를 통해 이런 활동이 행해져 왔다. 표준어는 공기와 같이 잘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는 것이다.(116~117)

## ○ 김세중 외(2004)

- 최근 들어 ‘다른 나라에는 표준어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역시 표준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표준어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도 필요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표준어 규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우리말’에 필요한 것이지,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국어정책을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국어에 대한 연구와 정리가 이루어진 지 고작 100년 남짓한 시점에서, 그나마 뼈대를 갖춘 표준어 규정을 마련한 지 이제 십 수 년 만에 벌써 규정 폐기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엄밀히 따져 우리가 언제 번듯한 표준어 규정 한번 가져 보거나 했는가요? 지금의 표준어 규정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의 표준어 규정은 과거 혼탁했던 우리 말글의 쓰임을 일정한 틀로 정형화함으로써 언중의 말글살이를 편하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의 건강한 성장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불편은 표준어 규정이 없던 예전의 혼란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략- 말과 글은 살아 있는 생명체 같아서 어느 때에 태어나 한순간 혹은 오랫동안 안 자라다가 죽어 갑니다. 그 생성-성장-소멸의 텃밭은 언중의 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과 글의 주인 역시 언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중의 쓰임새와 동떨어진 규정은 제 구실을 할 수 없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표준어 규정은 좀 더 언중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현재 방언의 족쇄를 채워 놓은 말에 대해 좀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중이 널리 쓰는 말이라면 문법적 잣대를 떠나 나름의 생명을 불어넣고 서로 경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말글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지나친 구속’이나 ‘지나친 방임’ 모두 우리 말글을 죽이는 독약이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엄민용, 153~154)

- 조선총독부에서 1912년 4월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보면, ‘경성어를 표준어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표준어문 규정 제정 원리와 동일한 중앙집권적 권위를 “동경=서울”로 실현시킨 것입니다. 80여 년 동안 표준어 규범에 의거한 학교 교육의 결과 서울 방언이 남한 전역의 공통어(common language)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서울 토박이가 아닌 교양인이 구사하는 말씨가 과연 표준어로 볼 수 있을까요? 서울 지역 토박이가 아닌 지역 교양인들이 사용하는 말씨는 상호 통용이 가능한 공통어 내지 통용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급팽창한 “서울” 지역과 또 그 속에 유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양인”이라는 정체를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야마노테 선 안의 동경 말씨를 표준어로 규정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NHK방송 언어를 규범으로 하는 공통어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근대적인 표준어 사정원칙에 묶여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표준어를 사정하기 위해 대대적인 언어 지표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다수가 사용하는 공통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 지표 조사를 전제하지 않고 표준어 사정 원칙에만 의존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언어 사용의 실태 조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1988년 이전과 그 이후 사이에 언어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언어 변화가 일어났다면 변화에 맞추어 표준어를 다시 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한 언어 사회의 구성원들은 세대차, 성차, 직업차를 보일 것이고 개인차마저 보일 것이어서 표준어를 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태에 대한 파악 없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어 사용 실태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맹자 퇴치라는 차원에서 표준어가 존중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방언이 표준어에 비해 열등한 퇴치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⑧항에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방송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어의 지리적 기준을 수도지역인 “서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서 향후 행정 수도를 이전하였을 경우와 통일을 대비한 한민족어를 전제로 할 경우 “서울”지역 언어가 규범이 될 정당한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중략 – 작가들이 사용하는 방언은 모국어의 규칙 위반인가요? 이문구, 황석영, 최명희 등 많은 작가들이 표준어와 방언을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다양한 지역 방언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옴시레기’(모두, 전부)(최명희 혼불)와 같은 예나 또 백석의 시 작품에서도 ‘징기징기’(세수를 안 해서 볼에 더러운 자국이 드문드문 있는 얼룩), ‘들쿠레하다’(좁 달고 구수하고 시원하다.)와 같은 표준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어쩌면 이와 같은 작가들은 손가락으로 바위에 모국어로 흠을 새기는 것처럼 한민족의 언어를 갈고 닦아온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어떤 사전에서도 이러한 민족 언어인 방언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표준어 정책을 규범 언어인 표준어만 있고 지역이나 계층의 방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어를 버려온 언어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준어는 공통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통어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로서 첫째, 한민족 방언 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어이고, 둘째, 한민족 언어 내에서 방언 간의 공통어이며,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성원 간(계층간)의 공통어라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민족 언어의 규범이 되고 또 잘 다듬어진 말인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공통어는 바로 “한민족 언어 내에서 방언간의 공통성”을 토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어 규정을 “한민족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이를 정한다.”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분권의 실천적 운동으로 지역 방언의 보존과 이를 활용하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문정책의 틀을 수도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그 축을 옮길 때 진정으로 지역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화의 문화 운동으로서 지방 언어를 존중하는 공통어 정책은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넘어서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사회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일깨우는 본질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적 사회의 유산인 서울 중심주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언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자란 사람이 처음 서울에 가면 웬지 주눅이 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언어와 지리적 비친근성의 문제 때문입니다.(이상규, 160~164)

#### ○ 이연숙(2006)

– ‘표준어’라는 개념은 메이지 이래의 이러한 방언 박멸 정책의 심벌로서의 표현이었다. 그러자 전후에도 ‘표준어’라는 말에는 전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

때문에 지금도 학문적으로 ‘표준어’를 논할 때조차도 세상에 침투한 ‘표준어 알레르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정도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표준어’에서 ‘공통어’로의, 다소 빠른 ‘치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5년에 간행된 전후 최초의 『국어학사전(國語學辭典)』을 보면 ‘공통어’는 “일국의 어디에서도 공통으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언어”로, ‘표준어’는 “공통어를 세련되게 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통제된 이상적인 국어”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공통어’와 ‘표준어’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의미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어’가 ‘표준어’의 치환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시바타 타케시에 의하면, “공통어라는 말이 환영받은 것은 표준어라는 용어에 동반되는 ‘통제’(……)라는 부수적 의미가 꺼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바타는 “국어 교육의 목표가 표준어에서 공통어로 바뀌면 목표의 달성은 쉬워진다. 공통어는 전국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말일 뿐이지, 특별히 ‘세련’된 ‘이상적인’ 언어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 말에 따르면, ‘표준어’에서 ‘공통어’로의 전환은 단순히 목표의 수준을 낮추어 실현의 길을 쉽게 한다는, 극히 실효적인 이유 외에는 없다는 뜻이 된다. 즉 ‘공통어’는 ‘표준어’에 한 발 못 미치는 모습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이해했을 때에는, 현재 ‘공통어’가 일본 전국에 침투한 것은 메이지 이래의 ‘표준어’ 교육의 귀결이라는 뜻이 된다. 거기에서 ‘통제’라는 ‘부수적 의미’만 떼어 내면 ‘표준어’는 ‘공통어’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표준어’에서 ‘공통어’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전전과 전후의 일본의 언어제도사의 연속성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공통어’라는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함으로써, 언어 속에 숨은 권력의 문제가 오히려 간과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공통어’의 보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어의 사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이다.(262~263)

#### ○ 최경봉(2006)

– 이는 표준어 정책과 교육이 단순히 공통어를 확립하고 이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에서 국어의 가치와 국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규정하면서 국어사용을 제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 언어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방언을 위축시키는 표준어 자체에 대해 또는 표준어의 정립 과정에 수반되는 언어의 인위적 가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336)

– 표준어 규정집은 옳은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를 가르거나 표준어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규정집의 기술 방법과 내용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하는 게 현실이라면, 이는 언어의 다양한 용법과 효과를 익히면서 국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국어교육에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규범은 사전을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사전을 통해 규범을 제시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표준어 규정집을 없애 규범의 경직성을 완화한다는 것으로, 표준어를 '바른 말'보다는 '보통 쓰이는 말'로 규정한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중략- 이런 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은 국가에서 고시한 표준어규정집을 사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이 사전은 현행 표준어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라는 한계가 있다.(349~350)

- 사전이 맞는 표현과 틀린 표현을 나누는 것보다 단어의 사용 양상을 보이는 데 주력할 때, 언어 표준화의 갈등을 상징했던 표준어와 방언의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문체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지만 비표준어로 규정된 '깡충깡충', '손주', '내음', '꼬시다' 등과 같은 고빈도 어휘를 자연스럽게 복권시킬 수 있을 것이다.(350)
- 표준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굳어진 표준어 절대주의로 인해 일부는 표준어 정책이 개인의 혹은 개별 공동체의 다양한 표현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표준어 무용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태도는 표준어 절대주의에 경도된 표준어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적표현과 공적표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355)
- 공적 언어의 핵심은 교육, 법률, 행정 언어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교육체제가 유지되고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표준어는 교육언어를 통해 기본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틀이 표준어 규정집과 표준어사정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어사전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를 거쳐 현실 언어를 반영하고, 국어사전에 기록된 언어 표현이 교육언어로 선택적으로 활용되면서 공적표현인 표준어의 틀이 정립되는 것이다.

-중략- 반면 사적 언어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문학작품, 드라마, 영화, 노래가사 등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대표적인 사적 언어이다. 사적 언어에는 표준어뿐만 아니라 특정한 계층에서 혹은 특정 지역에서 쓰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방언의 보존과 표준어 정책의 확고한 유지는 대립적이지 않고, 사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과 공적 표현을 강제하는 것 또한 대립적이지 않다.

-중략-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표준어에 대한 거부감은 표준어가 공적 영역의 표현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표현도 규제한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356~357)

#### ○ 조태린(2007)

- 언어과학의 입장에서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언어의 표준 변종이 비표준 변종에 비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표준 변종과 비표준 변종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언어들 간의 우열 관계처럼 언어 외적인 것이다. -중략- 표준 변종과 비표준 변종 간의 이러한 대립 논리는 비표준 변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열등의식이나 죄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표준어나 표준어 사용자에 대한 반감을 불러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221)

- 우리나라의 표준어와 표준어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비판들조차도 대부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표준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명제이다. 이 명제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준어가 없다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근대 국민교육 체제에 걸맞은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나 대중적 정보전달 및 공통 문화 형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런데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한 위와 같은 주장은 표준어가 이미 형성되어 일정기간 그것을 사용해 온 경험이 있는 국민국가 체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근대 국민국가를 막 건설하기 시작하던 대혁명 시기의 프랑스나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의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언어적 혼란을 겪던 시기의 국가들과는 달리 상당 수준의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진 국가들, 특히 표준어를 매개로 한 공교육 체제를 확립한 현대 국민국가들에서는 방언적 차이가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표준어가 근대 국민국가 형성 초기에는 언어의 통일을 통한 국가 공동체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방언적 차이가 전 국민적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큼 약화된 상황에서 표준어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222~224)

- 표준어는 화자들의 요구에 앞서, 때로는 화자들의 요구와 무관하거나 반하여 국가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표준어는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방식에 의해 높은 수준의 규범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진 언어’라고 규정될 수 있다.

더구나, 한 언어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방식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그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수단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원활

한 의사소통을 위한 표준어도 단 하나가 아닌 복수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표준어의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그러한 비판의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의 양식과 수단이 결코 단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은폐한다는 점이다.(225)

- 표준어 규정은 언어 현실과 괴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함께 묶어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어문 규범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와 성격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사실, 한 언어의 표기법과 표준어는 서로 다른 원칙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표기법이 한 언어의 낱말을 글로 표현하는 '규칙의 집합'이라면, 표준어는 인위적이고 의식적으로 규범화한 '낱말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서인지 다른 나라에서는 표기법이 하나의 규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찾아볼 수 있어도, 표준어가 하나의 규정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228)

- 표준어 규정의 고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이 작업을 주도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하려 한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언어 생활에 관심을 갖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라는 단일 주체가 제도적 강제를 통해 규정한 표준어는 언중들에게 자연스러운 소통의 수단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규율과 억압의 기제로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 표준어 형성 주체들 간의 상호 비판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매우 보수적이고 타성적인 규범을 만들기 쉽다.(232)

- 최근 들어 공통어를 현행 표준어의 대안으로서 제기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중략- 표준어 정책의 대안으로서의 공통어 정책은 이미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공통어란 용어가 근대 국민국가 형성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된 표준어 중심의 언어정책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다. 공통어라는 용어가 '한 나라의 어디에서나 공통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 언어'라는 의미로 일본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1949년 이후라고 한다. 공통어가 표준어라는 용어에 수반되던 '통제'와 '세련됨' 또는 '이상적임'의 의미에 대한 반감을 극복하고 좀 더 유연한 언어정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공통어는 '인공적'인 표준어와 달리 '자연발생적'이지만 방언처럼 지역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통어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은 표준어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새로운 용어의 사용에 의해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그것이

단지 하나의 상징적 몸짓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통어가 사실상 그 규모와 범위를 넓힌 표준어, 즉 '확장된 표준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통어는 여전히 강제적일 수 있으며, 공통어에서조차 제외된 방언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도 계속될 수 있다.(234~235)

- 이제까지의 표준어 정책이 '표준어/비표준어'의 대립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어 → 확장어(심화어)'의 단계 논리 또는 '공적 언어-사적 언어'의 상황 논리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자의 논리에 따르면, 표준어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공적인 장면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일 뿐이다. 다양한 주관적 생각과 느낌을 담아 표현해야 하는 사적인 장면 등에서는 표준어가 커다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의 변화는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대립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의 사정 작업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사전의 기술 방식도 바꾸게 한다. 사전에는 각 어휘의 사용 빈도와 사용 상황에 대한 정보만이 제공되며, 사전 이용자는 그 수준과 필요에 따라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기존의 비표준 변종 사용자들도 하여금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단계 또는 상황에 따라 나름의 표준어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주체들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237)

#### ○ 손중선(2007/2008)

- 우리가 우리말의 표준을 정하면서 방언과 담을 쌓을 이유는 없다. 극단적으로, 아무리 뒤섞여 뒤죽박죽이 되어도 여전히 그건 우리 한민족의 언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인 사투리를 배척한다는 것이 악의 없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19세기 선교의 관점에서 표준어를 정한 것과 결과적으로는 아주 닮아 있다. 사적인 경우에는 사투리를 써도 된다고 했었지만, 서울에 완강한 성벽을 쌓아놓고 성 밖에서만 사투리를 써야 하며 성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식의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선교에서 드러나는 이롭지 못한 태클(擇-的) 언어정책이다. 사투리가 표준어로 입성을 할 때는 사투리의 옷을 벗고 들어온다. '똥금없이'가 그렇다. 울타리를 없앤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다.(222)

- 현 표준어규정의 또 하나 문제는 규정을 법률처럼 너무 엄밀하게 제정하고, 마치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는 듯이 지나치게 엄하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악법도 법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위험한 주장이 나오게 된다. 게다가 "쓰지 마라. 하지만 널리 쓰이게 되면 인정해주겠다"라는 식의 난감한 모순까지 낳게 된다.(223)

## ○ 정선태(2008)

- ‘표준어 규정’ 총칙 제1항의 이 규정은 일종의 ‘명령’처럼 언중들을 구속한다. 예컨대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며, 중심=서울에서 벗어난 주변=지방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어=사투리를 뒤로하고 표준어를 학습한다. 여기에는 탈주변화하여 중심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심에 동화되고자 하는 욕망은 배제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짝패를 이루어 우리를 억압한다.(113)

## ○ 차운정(2009)

- 표준어는 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언어이다. 이러한 표준어는 지역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언어라기보다는 추상적이고 가공된 언어라는 점에서 지역인에게는 탈맥락화된-지역의 사회적물리적 관계에서 분리된-언어이다.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본 하이데거의 논의를 빌어올 때, 지역인의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언어는 표준어가 아닌 지역어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가 국가적 공용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어는 지역인의 소통과 표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408)

## ○ 이익섭(2010)

- 표준어가 왜 필요한가? 왜 표준어를 써야 하는가? 한 마디로 국민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조차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사투리를 쓰면 그 사투리 때문에 불편을 느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청와대의 대변인이 사투리를 쓰면 거부감을 느낄 사람이 더 많아지겠지요. 축구 시합을 중계하면서, 나아가 뉴스를 하면서 사투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표준어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표준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는 표준어의 ‘통일의 기능’이라 하지요. 온도를 화씨와 섭씨를 뒤섞어 쓰지 않고 섭씨 하나로 통일하여 씀으로써 얻는 편의를 준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표준어를 강조하면 그러면 사투리를 다 없애라는 얘기냐고 덤비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없애겠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사투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데 그걸 왜 없애겠어요. -중략- 쓸 자리를 가려 쓰라는 것이지 사투리를 쓰지 말라든가 더욱이 없애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어요?(183~185)

- 표준어는 공부를 하였다는 간판이기도 합니다. 표준어는 어느 나라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배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갈려 한쪽에서는 대개 자녀의 교육을 맡는 쪽이 여자이므로 그럴 것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해석이 재미있습니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타이틀이 있어 그것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반면 대개 가정주부인 여자는 그럴 길이 없어 표준어를 씀으로써 자기도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해석이 그것입니다. 표준어가 간판 구실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배운 사람임을 보증하는 딱지 구실을 표준어의 ‘우월의 기능’이라 하는데 사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사투리가 심하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지요. -중략- 표준어가 한 사람의 교양을 드러내 주는 척도의 구실을 한다는 것을 대개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186~187)

- 표준어의 기능으로 ‘준거의 기능’을 들기도 합니다. 표준어는 다같이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규약입니다. 그 점에서 교통법규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어를 부지런히 익히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태도와 같은 것으로 말하자면 준법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어는 그런 정신을 길러 주는 기능도 한다는 것입니다.(187)

□ 방언 활용 사례

<통영 동피랑 마을의 경상도 방언 소개문>



<제주민속촌의 방언 활용 안내문>



<대전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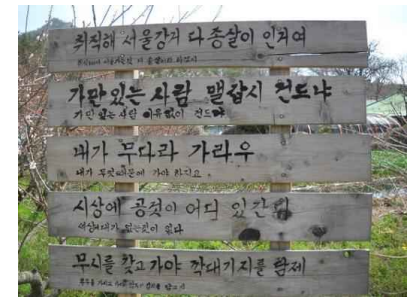
<경상도 사투리 어플리케이션>  
- '아리까리 사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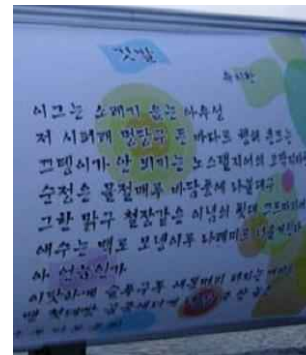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슬로건>



<강진 와보랑계 박물관>  
- 전라 방언 소개 -



<유명 시를 강원 방언으로 소개>



## 【참고 문헌】

- 고종석(2006), 표준어의 폭력, 『한국일보(인터넷판)』 2006년3월14일자. 고종석 저 『말들의 풍경』(2007년, 개마고원 발행)에 재록
- 김보경(2004), 표준어의 망상 사투리의 망상, 『당대비평』26.
- 김세중 외(2004), 새로운 표준어 정책의 모색을 위하여, 『새국어생활』14-1.
- 김세중(2004),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새국어생활』14-1.
- 김정대(2004), 지방분권화 시대의 어학 연구, 『한민족어문학』45.
- 남기심 외(2004), 광복 이후 표준어 정책의 회고와 전망, 『새국어생활』14-1.
- 민현식(1999), 표준어와 언어정책론(1), 『선청어문』27.
- 민현식(2004), '새로운 표준어 정책의 모색'에 대한 토론문, 『새국어생활』14-1.
- 박갑수(2004), 표준어 정책의 회고와 반성, 『새국어생활』14-1.
- 손중선(2007/2008), 새로운 표준어 정책 방향, 『언어 자원의 다양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자료집』, 이상규·조태린 외(2008)에 재록.
- 안상순(2004),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생활』14-1.
- 이상규·조태린 외(2008),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표준어 넘어서기』, 태학사.
- 이연숙 저, 고영진·임경화 역(2006),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출판.
- 이익섭(2010), 『꽃길 따라 거니는 우리말 산책』, 신구문화사.
- 정선태(2008), 표준어의 점령, 지역어의 내부식민지화-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시점으로, 『어문학논총』27.
- 조태린(2007),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말연구』20.
- 차윤정(2009), 지역어의 위상 정립을 위한 시론, 『우리말연구』25.
- 최경봉(2006),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31.



부 록 2

조선일보 기사

【 제3회 토론회에 대한 기사 - 7월 22일자 】

朝鮮日報

2011년 07월 22일 금요일  
A23면 문화

짜장면이라고 말하고  
자장면이라고 적는다?  
맞춤법 규정 도마 위에

청문회 같았던 국어정책토론회

“표준국어대사전이 있는데 심문 맞춤법 규정이 필요한가요?” (신지영 교수)  
“맞춤법 규정이 없다면 사전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김정남 교수)

2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국어정책토론회는 현행 국어맞춤법에 대한 청문회 같았다. 한쪽에선 ‘현실과의 괴리’를 들어 폐기를 주장했고 반대편은 ‘개정을 통한 유지’를 옹호했다.

국립국어원 주희, 국어학회·조선일보 공동 주관으로 열기를 더해가는 이번 세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복합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 (성문 한글 맞춤법 규정 유지해야 하나)였다. 신지영 (고려대·국문학)·차재은 (경기대·국문학) 교수와 김정남 (경희대·한국어학)·김인균 (신라대·국문학) 교수가 팀을 이뤄 규정 폐지와 유지 입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신 교수가 “국어사전이 보급되면서 어문 규정은 시효가 끝났다.”고 하자, 김정남 교수는 “국어사전도 맞춤법 후광 덕에 권위를 갖는다. 건설적인 비판은 좋지만 폐지는 삼부다”며 응수했다. 토론에서는 “맞춤법에 ‘법’이라는 경직된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지침의 형태로 두는 게 언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차 교수는 의견과 “법과 판례처럼 맞춤법 규정과 사전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김인균 교수는 견해가 맞섰다.

방청석에서 이강규씨는 “‘빠스’ ‘달라’라고 해왔는데 갑자기 규정에 따라 ‘바스’ ‘달리’라고 한다.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이지 언어생활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선닷컴 토론투방에서는 ‘사이시옷’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원태씨는 “방송에서는 맞춤법 규정에 따라 잘못비라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잘마비라 부른다. 표기법이 된소리를 억지로 표기하려고 무리하게 집착한다”고 썼다. 사회를 본 손범규 한국어연구소(이하 SBS)는 “현재 아나운서연 협회가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판 음성을 입력 중인데 ‘빠스/바스’ 같은 논란이 되는 단어는 녹음을 주저하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이런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4차 토론회는 8월 11일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를 주제로 열린다.

전병근 기자 bkjeon@chosun.com

【 네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 기사 - 8월 8일자 】

朝鮮日報

표준어만 최고인감유

국어정책토론회 [4]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표준어는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이렇게 규정할 이래 우리 언어생활은 표준어 사용이 우선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다양한 방언들이 죽게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어정책토론회 네 번째 주

제는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표준어 위주 정책을 놓고 윤석민 전북대 교수와 김희숙 조선대 교수가 찬반으로 나뉘어 발표한다. 11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KBS 아나운서 강성근과 소설가 성석제가 찬반 토론자로 나선다.

2011년 08월 08일 월요일 A18면 문화

국어정책 토론회 계획

1회(9월 23일)	“추진방안”인가 “조정”인가
2회(7월 7일)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
3회(7월 21일)	“복합국” 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
4회(8월 11일)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5회(9월 25일)	“누리꾼”인가 “타타꾼”인가
6회(9월 8일)	대학 영어강의 의무화여야 하나

국가 구성원의 동질감 안 해지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 필요

표준어 폐지 논란이 중심에 있는 것은 방언문제이다. 표준어 선정이 불합리한 우월성의 함정이 되고 표준어 사용 권고가 자연스러운 언어의 발달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표준어 개념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다. 표준어는 지역 공동체를 넘어 국가 공동체의 공통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표준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표준어의 ‘절대적 우월성’이 위험하다고 비난한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는 규정의 ‘서울말’에 방점을 두어 서울말이 아니라 예 표준어가 될 수 없으나, 서울말만 우월하나 이익을 제기한다. 물론 방언도 우리말이며 아끼고 보존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방언이 언제나 비표준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표준어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말이 아니라 방언을 바탕으로 한다. 어떤 방언이든 구성원이 널리 사용하면 표준어가 될 수 있다. ‘장개’나 ‘김대’도 원래 방언이었지만 지금은 표준어가 됐다.

표준어는 외세국 침략 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 및 한국인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세계 도처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과 한국어에 배우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는 한

국인의 삶과 문화 전반을 두루 알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표준어이다. 표준어와 방언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 공적 대화에서 보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무엇이 옳으니보다 표준어와 방언이 가진 각각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표준어가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발전에 장애라는 주장은 표준어가 우리말의 변화를 반영해왔음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표준어가 기본 소통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표준어가 우리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표준어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표준어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국어, 이해할 수 없는 외래어의 사용 그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따른 우리말 비표준어는 구성원의 동질감을 해치고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표준어는 이런 통일을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표준어 필요하다



윤석민 전북대 국문과 교수

방송선 표준어를, 사적 자리선 방언 쓰는 게 최선인가

표준어 사용 원칙은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처음 제시됐다. 그 뒤 표준어는 전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또는 대중적 정보 전달과 문화 향상의 도구로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권력화한 나머지 비표준어에 해당하는 방언 사용자나 다양한 집단이 제한적 의사소통 방식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표준어는 좋은 말이고 올바른 말인 데 방언 방언은 나쁜 말, 잘못된 말이라고 보는 인식이 어떤 면에서 ‘서울 대 지방’이라는 특이한 이분법적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방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일상을 담화하는 데 필요한 소통의 도구이다. 언어생활이 결코 표준어 일색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잘 정제된 표준어의 배 경에서만 일해오지 않았다. 또 우리는 과정에서 슬금 슬금, 점차 과잉에서 정화한 표준어만을 습득해 구사하는 언어적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다. 이제 는 더 이상 표준어 수순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 해방으로 몇몇 표준어 규정의 손질이나 복수 표준어의 확대 등을 발상지만 그것만으로 미흡하다. 공적인 자리나 방송 때 등에서는 ‘표준어’를, 사

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가려 쓰는 방식도 최선은 아니다. 어떤 화자라도 표준어 구사는 사물보다 방언으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타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떠한 규범이나 인식이 그러한 언어 사용을 부차적인 것으로 평가절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권력화한 나머지 비표준어에 해당하는 방언 사용자나 다양한 집단이 제한적 의사소통 방식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모두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생활을 지닌 국민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필요로 인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방언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런 방향의 언어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희숙·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교수



김희숙·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교수